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초록

- ◎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고, 대응을 위한 법제도가 혼인 및 혈연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어, 그 외의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밀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개념, 유형, 특징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향후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젠더폭력 대응의 방향과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친밀 관계 폭력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일터에서의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 마련,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성 형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제안함.

연구배경

-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거나 현재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발생한 살인이나 보복 범죄 등 심각한 사건이 조명되면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법률상 '가정구성원' 개념에 이르지 못하는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발생한 폭력이 성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무엇이 '친밀 관계 폭력'인지, '친밀 관계 폭력'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 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법과 정책적 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의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화 경향을 배경으로 결혼에 수렴하지 않는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등 친밀성을 둘러싼 새로운 실천들이 이루어지면서 친밀성에 기반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친밀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개념, 유형, 특징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향후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젠더폭력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국제 규약으로,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역사적으로 지속된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며, 여성폭력이 생물학적인 성별의 문제이거나 우연히 발생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별 이분법에 근거하여 사회구조와 질서에 내재된 젠더 문제임을 선언함.
- ▶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개념은 ‘젠더폭력’과 ‘여성폭력’ 개념을 등치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젠더폭력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지속되는 현실에 전략적인 초점을 맞추고자 할 때 유용함. 누구나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를 경험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젠더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다수의, 그리고 심각한 젠더폭력 피해는 대부분 여성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됨. 이를 남성 등 여성 이외의 집단을 배제하는 용어로 사용하거나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젠더 개념의 부재에 따른 명백히 잘못된 이해임.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개념은 젠더화된 사회질서로 인해 젠더폭력 피해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로 인한 폭력을 경험하는 모든 개인 또는 집단을 포괄하기 위한 것임.
- ▶ 가정폭력은 혈연 또는 친밀성에 기반하여 연결된 개인들 간의 사적이고 가정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 학대, 방임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됨. 가정폭력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또는 ‘젠더기반폭력’과 중복되고 여성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별 가정폭력을 정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함.
- ▶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폭력이라는 의미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개념임. 어떠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합의된 보편적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도화된 혼인 관계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를 포괄할 때 사용됨. 중요한 것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여성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임.
- ▶ 데이트 및 관계 폭력 용어는 주로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청소년 또는 대학생의 데이트 관계 속에서의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되어 왔음. 미국에서 데이트폭력은 ‘로맨틱하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으로 정의되며, 관계의 존재 여부는 관계의 기간, 관계의 유형, 관계에 연루된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의 빈도를 고려하여 결정됨.

● 친밀 관계 폭력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실태 검토

- ▶ 전 세계적으로 15세 이상의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동안 현재의 배우자나 친밀한 남성 파트너로부터의 물리적 또는 성적 폭력 피해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을 모두 경험함. 이는 여성폭력의 심각성과 만연성을 보여줌.
-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의 교제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집계를 시작한 이후 관련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2가지 유형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는 복합피해의 특성이 나타남.
-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폭력 범죄인 교제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고/검거/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봄. 분석 결과, 112 신고시스템 내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스토킹 코드가 신설된 이후 사건 신고 건수는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였음. 특히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함.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교제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검거 이후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비율은 모두 3%대 이하로 극히 드물었음.

● 피해자 지원 활동가 면접조사 분석 결과

- ▶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주로 접하고 지원하는 대부분의 친밀 관계 폭력은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등 피해자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폭력으로 확인됨.
- ▶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으로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교제폭력의 경우 가족의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보다 더 사소한 피해로 여겨지거나, 가해자와 헤어지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더욱 강하게 발생하기도 하였음.
-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화적이거나 단일한 유형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관계의 지속 안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폭력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을 보임. 또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불균형한 발생과 효과는 성적 지향, 장애, 이주 등 개인이 위치한 다양한 맥락과 교차하면서 강화되고 있었음.
- ▶ 친밀 관계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성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경우가 많았음. 가해자와의 관계를 폭력으로 인지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음.
-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젠더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음. 대표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못하는 연인 관계에서 성폭력 또는 스토킹 이외의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가 그러함.
- ▶ 다수의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들이 직장 다니고 있음에도, 현행 피해자 지원체계 및 제도는 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폭력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있어 변화된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피해자 면접조사 분석 결과

- ▶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나고 있었음. 최근 데이트 앱,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친밀한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온라인을 통해 만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거나 거짓말로 속은 상태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음.

- ▶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이전의 폭력 징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폭력 발생 이후에 관계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폭력의 징후가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공통적으로 관계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제하려는 경향, 여성혐오적 가치관, 성적 학대의 정황이 주로 나타남.
-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폭력, 협박 등을 당하며 정서적으로 지배당하게 되고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낌. 이러한 상태에서 지속되는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일견 피해자의 ‘동의’에 기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동의’가 아닌 협박, 동정심 등을 이용한 강제된 동의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폭력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별을 유예하고 있었음. 그러나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경찰이나 주변인들에게는 폭력적인 가해자와 헤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피해자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 ▶ 피해자들은 신고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신고 이후 가해자가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이를 예방해 줄 법과 체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음.

● 해외의 대응 사례 및 시사점

- ▶ 국제기구와 각국의 법과 정책은 가족과 가구라는 전통적인 범주로부터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으로 대응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음. 가족 관계나 동일한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한정되지 않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개념을 도입하거나,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내용상 친밀한 파트너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하고, 파트너 등 상대방에 대해 행해지는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다른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간접적인 폭력까지도 포괄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었음.
- ▶ 또한 가정폭력 피해근로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치료, 거주지 이전, 사건 처리 절차 참여 등 근무시간 중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무급의 휴가를 제공하거나, 유연근무 또는 직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가정폭력의 징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 검토함.
- ▶ 그 외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을 함께 보호하거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 검토함.

● 특성

- ▶ 친밀 관계 폭력, 특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를 종속시키고, 억압하고, 고립시키고, 통제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구성되는 방식과 그 정도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젠더기반폭력의 특성을 보임.
- ▶ 혼인 및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및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이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관계적 친밀성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적 대응의 틀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의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향후 대응방향

- ▶ 젠더기반폭력을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집단에게 발생하는 폭력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여성폭력의 개념에서 젠더기반폭력의 맥락을 탈각시킨 채 생물학적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행위만을 남기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 ▶ 국내의 친밀 관계 폭력 논의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구분짓거나 교제 관계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왔음.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논의는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를 평등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친밀한 파트너를 포함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 ▶ 이러한 평등과 전환의 논의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성적 지향, 장애 여부, 고용 상태, 반려동물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더 많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법적 개선 방안

- ▶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 의무체포 정책 도입 등을 반영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 폭행·협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로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이 변경되어야 함.

●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 개선 방안

- ▶ 관계의 친밀성에 기반한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 ▶ 피해자 의료비지원과 무료법률지원사업이 확대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및 형사사법체계의 민감성 강화

- ▶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위반 시 즉각적인 개입과 가중처벌을 내리는 방안, 누적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도와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 훈련과 교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일터에서의 지원 및 보호제도 마련

- ▶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이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친밀 관계 폭력 대응과 지원의 사회적 책무가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적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 있음.

● 범죄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는 피해자 지원 필요

- ▶ 경찰 신고를 통한 도움 요청 비율이 낮은 친밀 관계 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범죄 피해의 인정 여부에 따른 지원을 넘어서는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반려동물에 대한 고려

- ▶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쉼터 마련 등이 필요함.

● 통계구축 방안 마련

- ▶ 친밀 관계 폭력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시계열적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

● 사회적 인식 개선

- ▶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도 강압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평등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함.